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향

배병준 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Key Point
- ☑ 정부는 4대 핵심과제를 2025년까지 추진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4대 원칙을 구현
-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관리 사업의 수준 향상을 기대함

Key Word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자율성, 다직종연계, 빅데이터,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1. 들어가며

앞으로 6년 후, 2025년이면 우리도 일본,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20%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년 후면 다섯 명 중 1명 이상은 노인이 되는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에 있다.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보면 일본은 12년, 미국과 영국도 100년이라는 기간을 예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8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초고령사회라는 사회변화에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초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노인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건강관리, 치료, 간호 등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부터 돌봄, 요양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까지 다양한 요구를 낳게 될 것이다. 현재의 돌봄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병원과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오고 있다. 재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수요자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시설을 선택하는 문제를 포함한 돌봄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지난 해 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족 해체 사례 보도와 의료적 사유가 아닌 돌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원을 선택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은 이제 돌봄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지난 해부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정책을 국정과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란 노화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018년 연두업무계획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하고 같은 해 보건복지부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겸직)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한 협의체 운영과 50여 차례에 가까운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는 2018년 11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였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전까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과 중점과제들을 발표하였다.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향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주거 지원 정책이다.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안정적 주거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18만호를 2026년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케어안심주택은 주거를 기반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주택을 말하며, 2019년부터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신규로 공급하고 점차 확대하여 기존 영구임대주택 14만호를 케어안심주택화 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등을 실시하는 집수리 사업을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불편한 노인 중 재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24만 세대에게 실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살아가려면 주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해 9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3개 부처가 함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과 재생, 주민자치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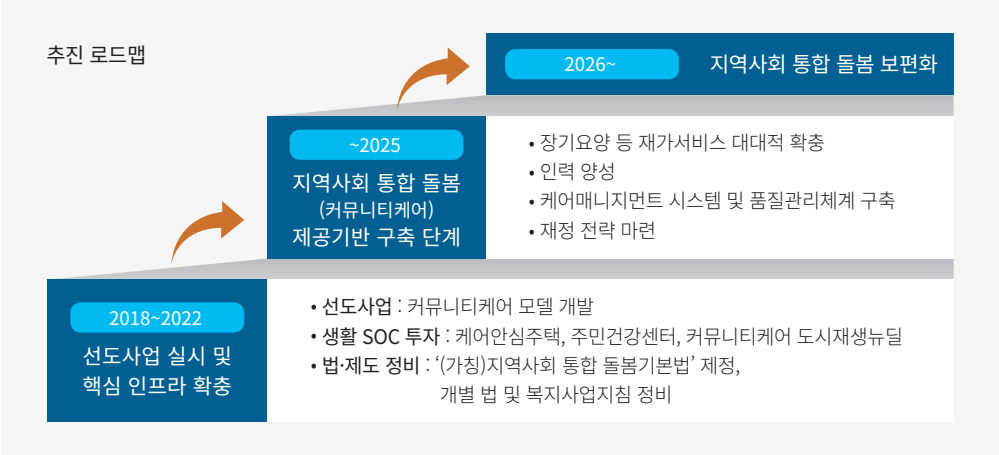
두 번째 과제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과 방문의료 서비스의 본격 제공이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 전체의 약 51%인 만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방문형 건강, 의료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110만 가구에 제공되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2025년 약 346만 가구로 확대하여 노인 4명 중 1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덴마크 등의 경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연령을 기준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연 2회 의무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횟수를 늘려나가는 등 예방적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로 보건지소 기능 전환,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 등을 통해 '주민건강센터'를 2020년까지 모든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을 목표로 확충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집에서 진료, 간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의료 서비스를 본격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지원함에 있어 입원 치료를 마친 노인이 안심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병원 내 '(가칭)지역연계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의 경우 대부분 뇌졸중, 낙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마친 후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퇴원 후 타인의 도움의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입원시부터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돌봄 서비스를 미리 연계하여 환자가 마음 놓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제는 재가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의 획기적 확충이다. 대표적 돌봄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커뮤니티케어에 걸맞게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어르신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사회서비스원 확대와 기존 기관의 전환을 통해 2022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을 목표로 확보하고자 한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집에서도 의료급여를 통해 돌봄, 식사, 이동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하는 것 또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수요자는 서비스의 확대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읍면동에 각종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케어안내창구를 개설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심층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보건과 복지간의 분절적 구조를 해소하고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함과 동시에 차세대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4대 핵심과제를 2025년까지 추진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실제 지역사회에서 구현해 보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의 특성과 지역 상황을 반영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그림 1].



[그림 1]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의 4대 원칙

커뮤니티케어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인 동시에 보건복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이다. 병원 또는 대규모 시설 위주에서 평소 살던 곳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개별 사업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나감으로써 기존의 돌봄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급여와 서비스가 대부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제공되어 오던 방식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제공되도록 바꿔나감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와 중복을 해소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에 걸맞는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혁신과 수요자의 삶의 질 제고라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4가지 추진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지역자율형 정책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신체의 불편함이나 각자가 처한 어려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책인 만큼 지역주민과 지역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획일적 기준과 집행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원 측면에서도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포괄사업비를 부여하고, 인력과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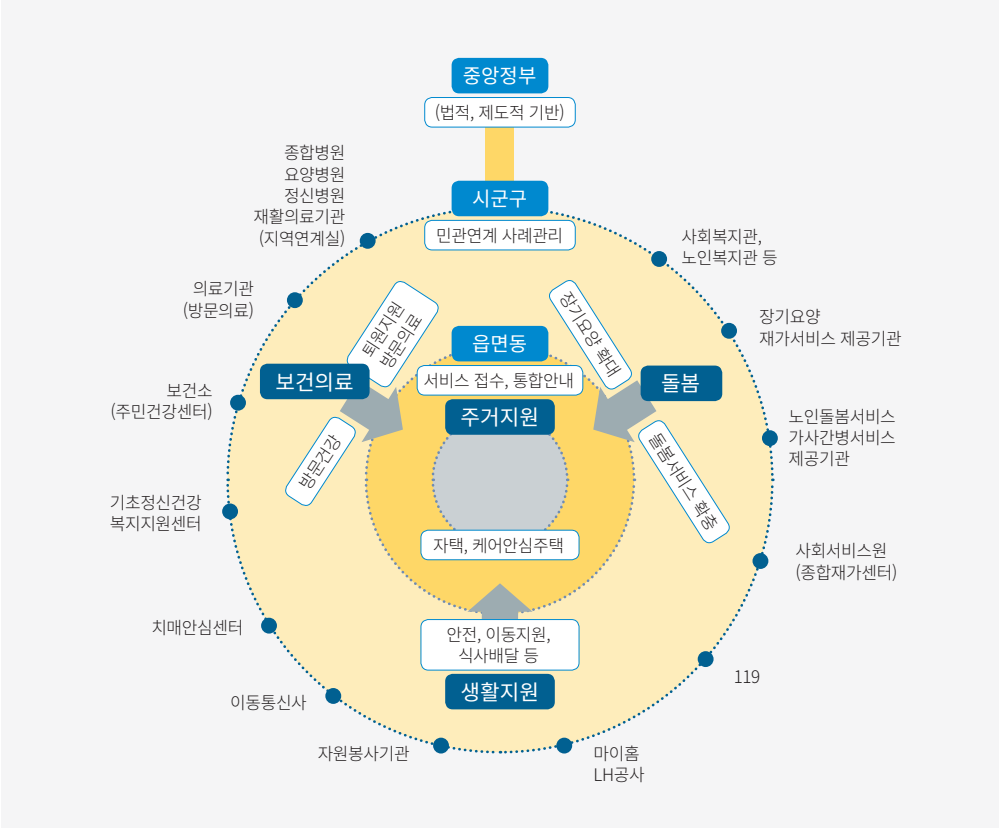
둘째, 정부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지방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문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다직종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부터 일상생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직종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여야 통합 돌봄을 이뤄낼 수 있다.

넷째, 커뮤니티케어는 민과 관이 협업하여 이루어나가야 한다. 민간과 공공 중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실질적 협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부터 실시되는 선도사업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에서 4대 원칙이 구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과 다직종 간의 협업과 연계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그림 2]. 해외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커뮤니티케어는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꾸준히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이다. 앞으로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정에서도 4대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에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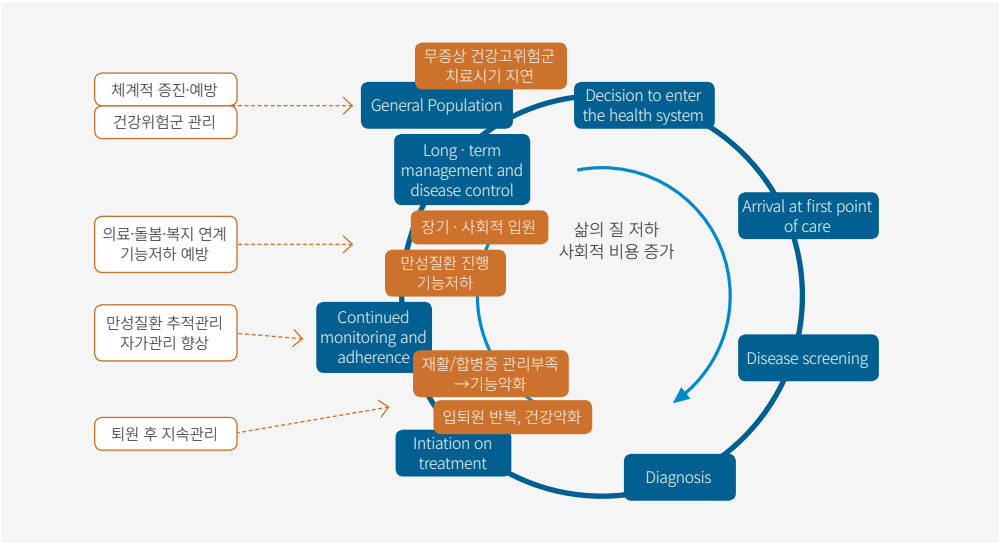


[그림 2]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2018.

4.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역 중 노인 사업 지역과 장애인 사업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그림 3].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단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만이 가진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커뮤니티케어의 목적인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내고자 함에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



[그림 3] Continuum of Care와 연속적 건강관리

자료: 김대영. "7월부터 빅데이터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실시". 한의신문. 2019.5.30.

노인의 경우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몇 차례의 케어 사이클(care cycle)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 적절한 시점에서의 개입과 관리를 통해 질병 악화와 신체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게 오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으로 구성된 '집중형 모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외 관련 논문, 유사사업 등을 종합하고 수차례 검토를 거쳐 집중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유형과 대상자의 발굴 기준, 유형별로 가능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마련하였다(표 1).

(표 1) 노인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구분	대상자 유형	세부 기준	제공가능 서비스(안)
지역사회	건강증진·기능유지군	• 건강습관 개선군 - 흡연+음주 고위험자	•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 예방서비스(검진 등)
		•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관리필요군 - 등급 외 A 판정자, 등급 외자 중 노쇠 등	
	만성질환군	• 최근 입원력이 없는 만성질환 관리군 - 1년 내 입원이력이 없는 46개 만성질환자 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자 등 • 약제관리 대상자 - 6개월 간 약제 10성분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사람 등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연계 - Polypharmacy 등 약제 관리 - 방문 진료·간호를 통한 교육·상담 • 환자 발굴 및 진료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 미관리군 - 건강검진 연속 2회 이상 유소견자(고혈압, 당뇨) 중 이후 1년 간 진료내역이 없는 자 등	

구분	대상자 유형	세부 기준	제공가능 서비스(안)
이행기	요양병원 장기입원군	• 요양병원 180일 이상 입원자 중 선택입원군* *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 인지기능장애 • 연속 3번 이상(동일 병원, 90일 이상) 선택입원군 • 요양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재가생활을 반복하는 사람	• 퇴원평가 후 공통서비스 제공 - Polypharmacy 등 약제 관리 - 방문 진료·간호를 통한 교육·상담 • 질병군별 적절 서비스(재활 등) • 복지서비스 연계
	퇴원하는 이행기 환자군	• 재활 필요군 - 중증질환 혹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속관리군	• 질병 중증도, 치료단계별 서비스 제공 - 방문재활(관절가동, 삼킴, 일상생활훈련) - 교육(체위변경, 낙상예방 등) - 지역운동 프로그램 연계 • 환경개선(거주환경, 이동환경 등)
		• 재입원 고위험군 - 재입원 예측모형점수 10점 이상 & 질병중증도 5점 미만 * LACE: 입원기간·유형, 질병중증도, 응급실 방문횟수 등	
병원	입원 치료 반복군	- 재입원 예측모형점수 10점 이상 & 질병중증도 5점 이상 & 1년간 진료내역 기준 3회 이상 반복 입원	• 가정간호 서비스 • 복지서비스 연계

자료: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5.31.

대상자의 유형과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대상자 유형 중에서 실증사업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 유형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대상자 정보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인마다 일일이 확인하여 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할 때,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 직무 담당자 대상 보안각서 징구, 대상자 개인정보 활용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철회절차를 마련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의 세부 의료정보 없이 이름 · 주소지, 대상자 유형군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일상생활능력(등급외A)에 3가지 이상 장애(중증장애인 포함)가 있는 분들에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집수리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도 검토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 복지 서비스를 집중 제공해 봄으로써 건강관리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달성하고자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장에도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나가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는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그간 지역사회와 격리된 곳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과 인권을 높여 나가기 위함에 있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57.6%가 다소 거동이 불편해져도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입소 장애인의 약 50%가 시설 밖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조현병 환자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함께 포용하고 보듬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의 마련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노화나 장애,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당사자가 기존에 누리던 평범한 삶을 평소 살던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삶을 재구축하는 것, 그것이 커뮤니티케어다.

지난 해 발표한 노인 기본계획에 이어 금년 5월, 아동에 대한 커뮤니티케어를 포함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다. 또한 금년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과 아동,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과 이웃 모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돌봐줄 누군가가 있어도 그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으려고 병원과 시설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사람들이 바라는 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각종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때로는 가족, 이웃과 얼굴을 붉히며, 갈등을 빚더라도 북적북적대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 통합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이자 우리가 꿈꾸는 포용국가이다.

참고문헌

김대영. "7월부터 빅데이터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실시". 한의신문. 2019.5.30.
보건복지부.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2018. 11. 20.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5.31.